

‘에너지3법’ 국회소위 통과…전남 신재생에너지 ‘탄력’

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법 등 처리
송전망 해소… 생산·공급 확대 기대
신안 해상풍력 등 대형사업 가속도
“안정적 전력충출…기업투자 활성화”

전남도의 주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해 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 모두 의결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22대 국회 들어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이날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중 ‘전력망확충법’은 첨단산업을 비롯해 전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확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전력망 건설과정 예산과 기금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활한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전력 수요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위원장이 17일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높은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지만, 지역 내 에너지 사용량이 낮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은 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

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입지 발굴-지구 지정-사업자 선정-인허가 등 전(全)과정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

상풍력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하고, 현재 국내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만 약 30GW에 달해 전남도와 관련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에너지 3법 소위 통과로 전남도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지역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신안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있다. 이 사업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완공되면 약 8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인 연간 8.2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단지는 오는 3월까지 시운전 후 본격적인 상업 운전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전남의 넓은 간척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역시 사업 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전력망확충법의 경우 전기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전력망을 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지역주민 반대와 건설비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조항을 포함,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지 이동을 권고하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력 또한 해당 기업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관련 실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절차도 추가하는 등 송전선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송전망 부족 문제로 인한 발전량 감소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다양한 제도적 한계가 해소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짐과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송출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3법은 1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국제공항·무안 물류공항으로 특화해야”

복합쇼핑몰 유치광주시민회의 주장
“군공항 이전문제는 실질 대책부터”

광주 시민단체가 국제선 임시 취항안이 거론되고 있는 광주공항에 대해 항구적인 국제공항으로, 제주항공 참사로 일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을 물류 중심 공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1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공항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고 무안국제공항은 물류 중심 공항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급박한 침체에 놓여 있는 지역 관광업계를 진흥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광주공항의 국제선 재취항은 꼭 필

요하다. 광주·전남 시민들도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인천·김해·청주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무안국제공항은 낮은 접근성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대형 항공사의 철수로 인해 여객 수요 확보가 어렵다. 물류·화물 중심 공항으로 전환할 경우 충

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안국제공항이 화물 과부하 상태의 인천국제공항 연간 물량 중 3만톤 규모만이 관할아도 국내 2위 화물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공항의 국제선 재취항은 광주를 서남권의 대표적인 국제관광 거점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며 “무안국제공항을 내년 예정된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 ‘화물 특화 공항’으로 명시하는 정책적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군공항을 억지로 무안국제공항으로 밀어 넣는 방식은 광주·전남의 단합을 해치는 분열적인 정책”이라며 “군공항 이전 논의만 바라보지 말고 타지역 군공항과의 훈련 통합·비행시간 축소·소음 보상비 상향·피해 지역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이 300mg입니다.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 알로에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